

프랑스 :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정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프랑스

이두형 (프랑스 루미에르 리옹2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프랑스 국회는 지난 2023년 11월 14일 정부 주도로 추진된 일명 “완전고용을 위한 법(loi pour le plein employ)”를 최종 통과시켰다. 완전고용을 범명에 명시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법은 프랑스의 실업률을 완전고용, 즉 5% 이내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에서 프랑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압력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16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그리고 주요 정치인과 기관장 등과 함께 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협의(Conférence sociale)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협상이 임금 구분표의 개선과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최소 임금이 있는 직종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물론 국가는 자신의 모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부 차원에서 저임금 문제에 보다 적극 개입할 것을 예고했다.¹⁾

프랑스 정부가 향후 제시하는 노동정책의 기초는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두 축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한 축에서 이를 담당하는 완전고용법의 내용과 단순히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자들에게 실제 혜택에 돌아가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프랑스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LesEchos, “Conférence sociale : ce qui a été décidé”, 2023.10.17.

■ 완전고용법 제정 배경

완전고용법의 배경은 프랑스 고용센터의 프랑스 트라바이 전환 등 여러 정책 제안을 한 티보 길뤼(Thibaut Guilluy) 프랑스 고용 고등위원(Haut-commissaire à l'emploi)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잘 나타난다.²⁾

보고서는 두 가지 모순점이 오늘날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2023년 프랑스에서는 300만 명이 넘는 인력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의 규모나 지역, 분야에 상관 없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모순으로는 많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의 미비, 사회 변화에 따른 욕구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적절한 직업교육과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와 공급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라 마련된 완전고용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고용센터의 “프랑스 트라바이” 전환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프랑스 고용지원정책의 중심 축으로 기능했던 프랑스 고용센터를 프랑스 트라바이로 개편하는 것이다.³⁾ 새 조직은 현재 프랑스 고용센터의 역할을 대체하며 오는 2024년 1월 1일에 문을 열 예정이다.

프랑스 트라바이 개편은 일종의 고용지원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임시로 “프랑스 트라바이 네트워크(Réseau France Travail)”로 불리는 이 네트워크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지원하고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 적절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노동시장에 수급하고자 하는 것

2) Guilluy, T.(2023), “France travail, une transformation profonde de notre action collective pour atteindre le plein emploi et permettre ainsi l'accès de tous à l'autonomie et la dignité par le travail”, <https://travail-emploi.gouv.fr/> (2023.11.18).

3) Vie public(2023), “Projet de loi pour le plein emploi”, <https://www.vie-publique.fr/> (2023.11.18).

을 목표로 한다. 해당 네트워크는 프랑스 트라바이는 물론 정부와 프랑스 전역에 436개 센터를 두고 16~25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시옹 로칼(Mission Locale)”,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캡 앙플루아(Cap emploi)” 등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고용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채용위원회(comité national pour l’emploi)”도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며, 프랑스 트라바이의 운영 규칙을 확립하고 국가 단위에서 고용지원 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국가채용위원회는 지역과 데파르트망 단위로 지역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지원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 서비스 수급자의 프랑스 트라바이 자동 가입

완전고용법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내용은 적극적연대급여나 가족수당 기금 공단(CAF)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자동으로 프랑스 트라바이에 등록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적극적연대급여 수급자의 경우 프랑스 고용센터에 등록된 비중이 약 40%이다. 자동 등록 도입에는 이와 같은 누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고용지원과 관련한 적절한 교육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프랑스 트라바이 자동 등록의 시행 일자 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2025년 1월 1일까지는 확정될 전망이다.⁴⁾

이에 따라 프랑스 트라바이에 자동 등록되는 대상군은 프랑스 고용센터에 등록된 구직자, 적극적연대급여 수급자 및 그들의 배우자 또는 시민연대계약(PACS) 파트너, 지역에서 미시옹 로칼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젊은층,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캡 앙플루아에 등록된 장애를 지닌 구직자 등이다. 또한 구직자가 고용지원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관이나 조직에 따라 따로 계약을 맺었던 것을 프랑스 트라바이를 통한 약정계약으로 일원화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받는 구직자나 적극적연대급여 수급자는 주당 최

4) Capital, “Pôle emploi devient France Travail : ce que la réforme va changer pour vous”, 2023.11.16.

소 15시간의 직무교육 등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⁵⁾ 다만 건강상의 문제나 육아 문제 등으로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인정되면 그 예외가 인정된다. 만약 의무 시간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수당이 중지되는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런 경우 프로그램 재참여 시 3개월 한도에서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 향상

완전고용법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또 다른 내용은 장애를 지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고용지원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일반 기업 등으로의 진출에 보다 방점을 찍으면서 실질적인 고용증진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 장애를 지닌 구직자들이 의료와 사회, 교육 지원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시설(ESAT)⁶⁾로 진로하기 위한 지도는 프랑스 트라바이의 권고가 있을 때만 프랑스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센터(MDPH)를 통해 이뤄진다.⁷⁾ 이때 일반 직장이나 장애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기업 진출에 보다 우선순위를 둔다. 또 ESAT에서 장애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센터를 통해 장애 노동자 지위(RQTH)를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프랑스 트라바이에 등록된다. 장애 노동자 지위가 없는 경우에도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을 받거나 15~20세의 장애를 지닌 청소년일 경우 역시 장애 노동자 지위와 같은 지위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 시범 운영했던 장애인 실업을 줄이기 위해 임시 계약 형태로 장애인을 고용해 직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임시노동 적응 기업(EATT)”⁸⁾과 “트레플린(Treplin)”으로 불리는 기간 계약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트레플린은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직업경험 축적 등을 목적으로

5) Public Sénat, “RSA sous conditions, France Travail : que contient le projet de loi «plein emploi» définitivement adopté par le Parlement ?”, 2023.11.14.

6) Service-Public(2023), “Handicap : travail en établissement et service d’aide par le travail (Ésat)”, <https://www.service-public.fr/> (2023.11.18).

7) Les Echos, “France Travail, RSA… : ce qui va changer avec la loi «Plein-emploi»”, 2023.11.15.

8) UNEA(2023), “L’Entreprise adaptée de Travail Temporaire (EATT)”, <https://www.unea.fr> (2023.11.18).

로 2년간 장애인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적응 기업 사이에 맺는 기간제 계약이다.⁹⁾

공공 육아서비스 강화

그다음으로 완전고용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는 공공 육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터로 돌아가기 어려운 부모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자체는 2025년부터 다년간에 걸쳐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사회는 2026년부터 영유아 돌봄센터를 갖춰야만 한다.

영유아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과 15년으로 제한한 운영기간 및 보육시설 허가 등 관련 제도적 틀을 마련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양질의 일자리 제공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 노동고용정책의 두 가지 축은 실업자와 구직자에게 효율적인 고용지원정책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효율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보다 나은 삶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재차 경제적 빈곤이나 실업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모든 직종에서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을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9) Ministre du travail, du plein emploi et de l'insertion(2023), "Pérennisation du CDD «Tremplin» et des entreprises adaptées de travail temporaire (EATT)", <https://travail-emploi.gouv.fr/> (2023.11.18).

온라인 플랫폼 라이더 최저시급 설정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 라이더들의 최저시급이 2023년 처음으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4월 20일 프랑스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연맹(FNAE)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독립 배달 라이더 임시대표와 온라인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세전 최저시급을 11.75유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독립 배달 라이더들의 최저시급이 결정된 것은 프랑스 사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¹⁰⁾

이러한 합의에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배경은 대다수의 독립 라이더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거두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있다. 현재 프랑스의 법정 최저시급은 이번 2023년 5월 1일부터 세전 11.52유로다. 현행 최저시급 이상을 보장함으로써 독립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가치를 보다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번 합의를 주도한 그레구아르 레클레르크 FNAE 대표는 “최소 20%의 라이더들이 이보다 낮은 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즉각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라고 평가했다.¹¹⁾ 올리비에 뒤슈트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이 첫 번째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마련하고 배달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이다.”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제도적 차원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또 다른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계정 비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플랫폼만이 이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배달 라이더는 고객과 관련한 사건으로 계정이 정지될 경우 그 사유를 통보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또 계정이 정지되는 것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통보 없이 계정 정지가 이뤄질 수 없다. 이 역시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이보다 앞서 차량공유서비스(VTC) 운전사들의 처우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 지난 2023년 1월 18일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사 노조들과 플랫폼들은 운전 건당 최고 7.65유로의 수입을 보장하는 합의를 맺었다.¹²⁾ 그에 따라 같은 해 2월 1일부터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단거리 서비

10) Le Monde, “Un accord va garantir un revenu minimal horaire fixé à 11,75 euros aux livreurs des plates-formes en France”, 2023.4.21.

11) BFM TV, “Un accord sur un revenu minimum a été signé pour les livreurs de plateformes en France”, 2023.4.20.

12) Franceinfo, “Les syndicats de VTC signent un accord pour un revenu minimum de 7,65 euros par course”, 2023.1.18.

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이용가격이 10.2유로 수준이 됐다. 이 또한 프랑스에서는 전례가 없던 것으로 이번 합의를 거쳐 가장 낮은 수준의 수입과 비교해 27%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해 뒤쇼트 노동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해당 분야의 노동자들의 사회권을 향상하는 역동적인 협상”이라며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¹³⁾

이처럼 2023년 초부터 온라인 배달 플랫폼과 차량공유서비스 등 새롭게 등장해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업계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프랑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본인들의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저임금 문제에 정부 개입 예고

실제 프랑스 정부는 임금 이슈와 관련해 쟁점화하면서 정부 차원에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섰다. 보른 프랑스 총리는 2023년 10월 16일 진행된 사회적 협의에서 2024년 6월 1일까지 협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최소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SMIC)보다 낮은 업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¹⁴⁾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눈에 띄는 진전이 없으면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분담금의 감세 기준을 현행 최저임금에서 해당 업종의 최소임금으로 삼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¹⁵⁾ 분담금 면제액의 기준이 보다 낮은 임금이 맞추면서 그만큼 감면되는 부담이 줄어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인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임금위원회(Haut Conseil des rémunérations)” 설립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해당 위원회는 임금 분류표 개정 모니터링과 가치 공유 메커니즘 발전 등의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¹⁶⁾ 구체적인 임무는 법안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남녀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직업 평등 인덱스(index égalité profession-

13) Capital, “VTC : le revenu minimum de 7,65 euros par course validé”, 2023.1.18.

14) Gouvernement(2023), “Conférence sociale : ce qu’il faut retenir”, <https://www.gouvernement.fr/> (2023.12.3).

15) Les Échos, “Conférence sociale : ce qui a été décidé”, 2023.10.17.

16) Le Figaro, “À quoi pourrait ressembler le Haut conseil des rémunérations annoncé par Élisabeth Borne”, 2023.10.17.

nelle)”의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직업과 가사 간 균형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프랑스 정부가 지향하는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목표한 바를 이룰지는 지켜 봐야 한다. 완전고용법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수치상으로는 실업률 하락 등 긍정적인 양상을 보여도 실제 질적인 변화까지 가져왔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시간을 두고 많은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의지도 현재로서는 방향을 제시하며 앞으로 이뤄질 정책 작업에 대한 큰 골격을 갖춘 것에 지나지 않다. 이와 관련한 관련 법이나 구체적 정책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개되는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가져오며 실업률을 낮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프랑스 정부의 시도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KLI